

## 독도소식지 10호를 내면서

독도소식지 9호 늦게 내고 10호를 장상으로 내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좋은 독도소식지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당신은 독도의 주인입니다. 주인이 지켜야합니다. 편집자

### 한·일정보보호협정(군사협정)에 대한 독도사수연합회의 입장

지난 6월 28일 국무회의에서 ‘한일정보보호협정(이하 군사협정)’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명칭부터 ‘군사’ 두 글자만 빼꼼수인 이 군사협정은 폐기되어야 한다. 정부는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 군사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만, 일본도 난마처럼 얽혀 있는 과거사 문제, 독도문제로 분쟁의 한 가운데 서 있는 잠재적인 적이다. 일본은 참혹한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진실 된 반성과 사죄를 한 적이 없다. 그 자세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우리 영토를 뺏으려고 하는 일본을 적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언제 국지적인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고, 국제재판으로 나갈 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아직은 군사에 관한 협정을 맺을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

독도사수연합회는 우리나라와 일본은 이웃 나라로 선린우호 관계를 유지하길 바란다. 반면 일본은 과거사를 정리하고, 역사왜곡을 바로 잡고, 독도를 한국 땅으로 인정하고, 남북한이 통일을 이루는데 최선의 협조를 해야 진정한 이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본이 변한 건 하나도 없다. 오히려 극우세력이 준동하고 있다. 대한민국 땅에서 위안부 소녀상의 말뚝테러가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군사협정으로 무엇을 어떻게 교류하고 지키겠다는 것인가?

정부는 아래 사항을 충족한 후에, 일본과 정보보호협정을 하라.

1. 일본은 과거에 잘못된 모든 일을 사과하고, 교과서에 수록하여 청년학생들에게 가르치라.
2. 일본은 독도에 대한 한국 역사를 바로 가르치고, 극우파에 지원을 중단하라.
3. 일본은 한국 분단의 책임을 통감하고, 한국 통일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라.

2012년7월22일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 北 “日 독도영유권 주장은 ‘조선재침론’”

[연합뉴스] 2012년 08월 06일(월) 오후 04:07  
방위백서 발표 계기 만에 비난 강도 높여(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독도 영유권을 재차 주장한 일본의 올해 방위백서 발표 이후 북한 매체들이 일제히 강경한 어조로 일본을 비난하고 있다. 북한 매체들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조선 재침론’이라고 발끈하면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고 집단 자위권 행사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군사대국화라고 비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6일 논평을 통해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령유권’ 주장은 조선재침론”이라면서 “일본에서 심심찮게 울려나오는 독도 령유권 주장은 다른 아닌 ‘대동아 공영권’의 옛 꿈을 실현하기 위한 재침시도로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편집자 : 지면 관계상 2면으로 갑니다)

## ‘동해’ 10만vs‘일본해’ 2만... 그런데 ‘2만’ 손들어준 미국

[서울신문] 2012년 07월 02일(월) 오전 01:40  
미국 정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기존 방침을 변경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백악관 홈페이지 민원 코너 ‘위 더 피플’(We the People)에 올린 답변문을 통해 최근 한국과 일본의 네티즌들이 각각 제기한 동해와 일본해 표기 청원과 관련, 이같이 설명했다. 미 정부가 동해 표기 논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캠벨 차관보는 “각각의 바다, 또는 해양을 하나의 이름으로 지칭하는 것은 미국의 오랜 방침”이라며

“일본 열도와 한반도 사이에 있는 수역에 관한 미국의 오랜 방침은 일본해로 지칭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미국의 일본해 명칭 사용은 국가 주권에 관련된 어떤 사안에서 그에 관한 의견을 함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동해 표기 서명자 수가 10만 2,043명으로 일본해 표기 서명자 2만 9,160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음에도 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 미 정부가 일방적으로 일본해 유지 방침을 밝힌 것은 무성의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 “독도는 일본땅?”, SNS 독도 소동

(서울=뉴스1) 입력 2012.08.06 15:43:24 | 최종 수정 2012.08.06 15:43:24

트위터 상에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내용의 글이 급격하게 퍼진 가운데 한 트위터러가 논란을 일축하는 글을 올려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달 31일 일본 정부의 방위백서 발표 이후 트위터 상에서는 “일본의 독도 소유가 확정됐다. 티아라와 올림픽에 의해 묻히고 있다”라는 내용의 글이 빠르게 확산됐다. 방위백서 본문 첫 페이지의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 및 다케시마(竹島 : 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부분이 논란의 불씨를 키운 것. 루머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 트위터러가 “독도는 일본에게 안 넘어갔습니다. 그저 일본이 매년 일본 방위백서에 써놓고 우기는 것입니다. 벌써 넘어갔다는 루머 퍼트리지 마시고 조금 더 우리땅이라는 긍지를 가지셨으면 합니다. 루머 리트윗 말고 이 글 좀 리트윗해줘요”(@Hwa\*\*\*\*)라는 글을 게재하며 루머를 반박했다. 이어 “솔직히 독도가 일본에 넘어갔는데 기자

들이 가만히 있을 이유 없잖아. 이런 대 특종감을. 1면에 실으면 바로 신문판매부수 짹! 올라갈 기사 감인데. 정부 압박? 그게 무서워서 정치인 비리는 어떻게 대서특필했담”이라는 글도 함께 올렸다. 해당 글은 게재된 지 15시간만에 1,300회 이상 리트윗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다른 트위터러들도 “독도를 일본에 뺏겼다는 루머가 카톡을 타고 번지고 있어요. 혼란스럽게 왜들 이래요. 날도 더운데”(@sam\*\*\*\*\*), “독도가 일본땅이 확정이 됐네 어찌네 하는 글 리트윗 하지 마요”(@JIN\*\*\*\*), “독도를 일본 소유로 확정하려면 지금 독도에 상주하는 해양경찰을 쫓아내야 하는데 그럼 일본은 헌법 9조 위반입니다. 당장 이라크 파병도 헌법9조때문에 한다 만다 대판 싸우던 일본이 군대 동원해서 독도를 침공한다고요?!”(@Cho\*\*\*\*\* ) 등의 반응을 보이며 근거없는 소문을 비판했다. 한편 일본은 지난 2005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규정한 뒤 8년째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선우 기자 lovetosw@news1.kr(저작권자 뉴스1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본, 독도 땅값 혈값 책정

[매일경제] 2012년 08월 06일(월) 오후 05:56  
5년마다 공시지가를 산출하는 일본 재무성이 독도를 미개척 벌판을 뜻하는 ‘원야’로 평가해 혈값 수준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세계일보에 일본 재무성이 작성한 ‘국유재산’ 대장에 따르면 올해 독도의 전체 공시지가는 437만엔(한화 약 6,332만원)으로 책정됐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독도 지가는 1945년 2,000엔으로 평가된 이후 계속 올라 2001년에는 532만엔(한화 약 7,700만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줄곧 떨어지는 추세다. 경상북도가 지난 5월 공개한 독도 공시지가는 12억원으로 일본의 책정한 가격과는 차이가 난다. 5년마다 공시지가를 산출하는 일본 재무성이 독도를 미개척 벌판을 뜻하는 ‘원야’로 평가해 혈값 수준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세계일보는 일본 재무성이 작성한 ‘국유재산’ 대장에 따르면 올해 독도의 전체 공시지가는 437만엔(한화 약 6,332만원)으로 책정됐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독도 지가는 1945년 2,000엔으로 평가된 이후 계속 올라 2001년에는 532만엔(한화 약 7,700만원)으로 최고

점을 찍은 이후 줄곧 떨어지는 추세다. 경상북도가 지난 5월 공개한 독도 공시지가는 12억원으로 일본의 책정한 가격과는 차이가 난다. 일본 극우세력은 한국보다 가격이 낮게 매겨진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경우 일본 정부가 매입가격으로 20억엔(약 290억원)을 제시했는데 이에 비해 독도의 책정가격은 너무 낮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에서의 독도 땅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독도의 공시지가는 올해 12억5247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6.6% 상승했다. 지난 7월 31일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또다시 ‘일본의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와 북방영토결가 미해결 상태에 있다’고 표현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8년째 되풀이했다.

한설비 인터넷기자

10월 25일14시 부산초량동정발장군동상  
고종황제 독도척령기념식에 참가바랍니다.



## 독도사수연합회 활동 자유총연맹부산지부. 도덕성본부. 협력하여 행사 함



▲ 일본교과서 독도영유권표기 시민단체 대응회의



▲ 금정산에서 독도지킴기 서명운동



▲ 고종척령 독도척령 111주년 기념식



▲ 대응 회의 후 일본 규탄대회(독인 안함)



▲ 서명운동 후 기념 촬영



▲ 이사부 울릉도, 독도 복속 1500주년 기념



▲ 독도에 사람 살게 하자는 11만여 명 서명 받은 것



▲ 자유총연맹부산지부.도덕성운동본부.독도사수연합회



▲ 고종척령기념식 후에 일본영사관에 항의서 전달식

(1면에서 계속) 통신은 이어 “일본은 우리 민족에게 해야 할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범죄국가”라면서 “독도는 영원히 신성불가침의 조선땅”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도 “력사적 사실을 외면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국제법에 대한 무식이나 력사 자료에 대한 리해상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침략 야망에 기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이트는

“일본은 독도를 장악함으로써 그곳을 재침기도를 실현하기 위한 전초기지, 군사적 교두보로 만드는 한편 그 주변수역의 풍부한 수산자원과 해저자원을 비롯한 경제적 리권을 독점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평양방송은 이날 “일본 반동들이 국제사회의 눈치도 보지 않고 노골적으로 군사대국화, 해외 팽창 책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본의 무기수출 3원칙 개정,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원자력 기본법 개정을 통한 핵무장 시도 등이 ‘군국주의 광기’라고 비난했다.

방송은 이어 “군국주의 부활의 길로 미친 듯이 내달리는 일본 반동들이 지역 정세를 어느 지경에 몰아넣을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면서 “이는 대동아 공영권의 옛 꿈을 실현하기 위한 일본 군국주의 세력의 책동이 보다 노골화되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 독도사수연합회 회원 가입 원서 (회비 1,000원 이상 마음대로)

|         |                     |       |             |
|---------|---------------------|-------|-------------|
| 성명      | 생년월일 :              |       |             |
| 전화 (자택) | (직장)                | (휴대폰) |             |
| 주소 (자택) | 우편번호 :              |       |             |
| (직장)    | 우편번호 :              |       |             |
| 직업(명)   | 소속단체 :              |       |             |
| E-mail  |                     |       |             |
| 참고 사항   |                     |       |             |
| 년납 ( )  | 월납 ( )              | 회비    | 자동 : 이체 ( ) |
| 자원봉사 =년 | 회 (할 수 있음) (할 수 없음) | 납부    | 수납 : 현금 ( ) |

우리 땅을 지키기 위하여 조금의 힘이라도 보태는 회원이 되기 위하여 독도사수연합회 회원 가입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독도사수연합회 회장 귀하

보낼 곳 : 607-809 부산시 동래구 명장로 63번 다길35 (명장1동) 독도사수연합회

### 독도사수연합회 새 회원 명단



박노분(고문)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정시한(고문)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후원금 주신 분

한희선 부산시 사상구 감전동 삼광 하이츠빌 50,000원  
김도희 부산시 남구 대연3동 3xx번지 10,000원

### 독도는 온 국민이 주인이다

독도의 주인들은 독도를 지켜야한다. 빼앗기면 안 된다는 생각은 다 있다. 그러나 지키려고 나서는 사람은 너무나 드물다. 독도를 마음만으로는 지킬 수 없다. 오직 독도를 지키려는 행동을 해야 독도를 지킬 수 있다. 독도를 지키는 방법을 몰라서 못 한다는 사람에게 인터넷으로 시간 날 때만이라도 하라고 권한다. 그러나 안 한다. 회비를 내는 것도 행동을 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안 한다. 애국심 부족이 아닐까? 모를 일이다. 독도 이상훈(본적독도)



## 『1910년 韓日병합조약』 유효론과 獨島 領有權 문제 7편



려해연구소  
RYEO HAE INSTITUTE  
麗海研究所 김영구 교수의 해양법포럼

이러한 일본의 기본 입장은 1945년 종전 이후, 및 1951년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 발효 직후부터 1960년 대에 이르기 까지, 제국주의적 침략 전쟁이나 식민통치 및 점령기간 중 인접국에 자행된 일본의 위법적 침해 행위들에 대한 어떤 형태의 반성과 사죄도 완강히 거부하는 기고만장한 전쟁무책임론(無責任論)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었던 특이한 ‘국제관계적 상황’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전후, 일본을 기고만장한 전쟁무책임론(無責任論)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게 한 특이한 ‘국제관계적 상황’이란 어떤 것이었나? 1945년 2차 대전 종결 처리에 있어서, 일본을 점령 통치하게 된 미국은 일본 점령정책의 효율적인 수행과 냉전시대로 접어든 당시 상황에서 일본을 동아시아에서 소련의 진출을 저지하는 최후의 방파제로 삼으려고 일본의 전쟁 책임을 면제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일본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에서 연합국 측의 적국(敵國)이며 침략자인 패전국(敗戰國)이 아니라 미국의 “충실한 동맹자(同盟者)”로써 법적으로 정의되었다. 미국 정부와 일본 점령 통치를 담당했던 맥아더 사령부가 주동하여 주도 면밀하고 또 철저하게 추진한 종전 이후 정책들에 의해서 침략전쟁을 실제로 주도한 일본 천황 히로히토는 잔학한 전범(戰犯)의 이미지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평화주의자(pacifist)로 그리고 전쟁행

위의 방관자(by-stander)라는 거짓된 ‘이미지’를 일본 국민과 국제사회에 각인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1945년 종전 당시의 국제관계적 상황은 일본을 1951년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 발효 직후부터 1960~70년 대에 이르기 까지 어떤 형태의 반성과 사죄도 완강히 거부하는 기고만장한 전쟁무책임론(無責任論)에 몰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2차 대전시 유럽 전역(戰域: war theater)에서의 전범국(戰犯國)인 독일과 태평양 전역의 전범국인 일본은 전쟁 책임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자주 대비(對比)된다.

독일은 종전 이후 철저하게 전쟁책임을 인정, 이를 사죄하고 배상하는 일에 성실하게 임하여 왔다. 일본과는 대조적인 독일의 이러한 태도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가? 독일이 일본보다 더 윤리적(倫理的)이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더 논리적(論理的)일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독일은 피해 국가들에게 성실하고 철저하게 사죄하고 배상함으로써만, 히틀러식 나치 독일의 비인도성, 범죄적 침략성으로부터 현대의 독일 국가를 “구별”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유럽 사회가 사회적 당위(當爲)로써 이러한 “논리적 정당성의 회복”을 독일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다음호에 계속) **독도 이상훈**

## 주일대사관 홈페이지 올린글

신청일 2012.08.17. 17:33:21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이상훈 회장입니다. 주한 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는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자료가 있는데 주일 대한민국의대사관 홈페이지에는 독도자료는 없고 독도사이트 링크만 걸었는데 대사관이 이렇게 해서 일본인들에게 우리 땅임을 알리지 못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외교통상부에서 퍼온 자료입니다 <http://ds5ean.byus.net/index5.htm> 이런 것이라도 올려서 일본인들에게 알리기 바랍니다. [ds5ean@naver.com](mailto:ds5ean@naver.com)

답변일 2012.08.19. 16:54:04

안녕하세요. 주일대사관입니다.

먼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애국심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홈페이지상 독도 관련 내용 게재 문제에 관해서는 외교부 및 주일대사관으로서도 필요성 등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고자 하니,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매우불만) 독도문제가 이제 시작 된 것도 아닌데 지금 검토 하겠다는 것은 한국대표부로서 할 말이 아니다. 이제 사 검토 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본다. 주일 대사는 당장이라도 독도가 우리 땅인 근거를 올리고 일본 주장이 틀리다는 근거를 올려야 한다.(독도 이상훈의 불만임)

## MB 독도방문에 '허'찔린 日, 검토 중인 반격은?

[세계일보] 2012년 08월 13일(월) 오후 07:48

한·일 간 독도 갈등이 8·15 광복절을 기점으로 ‘2차 폭발’을 예고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전격적인 독도 방문에 ‘허’를 찔린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15일 이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를 지켜본 후 외교참모들과 함께 독도문제에 대한 후속 대응카드를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일본의 독도 후속대응 방향과 그 의도를 정확히 읽고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향후 일본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독도 분쟁지역화 카드**

일본 중앙정부 차원의 ‘독도의 날’ 지정

일본 정부내 영토분쟁(독도 포함) 전담부서 설치

해상보안청 순시선 독도 해상 순찰 강화

독도 인근에 자위대 배치

역사교과서와 방위백서, 외교청서 등 독도 기술 대폭 강화

유엔 국제무대에서 독도 이슈 선제 제기

과학조사 명분으로 독도 해역에 해양조사선 파견

◆일본이 손에 쥔 반격카드

노다 총리는 11일부터 16일까지 여름휴가에 들어갔지만 이례적으로 총리 관저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았다. 휴양지 대신 관저에 침거하며 하반기 정국 구상에 골몰하고 있다. 그는 조기총선과 정계개편에 대비해 지지율 반등책을 고민하고 있는데 독도 이슈가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점쳐진다.

13일 아사히TV에 따르면 노다 총리는 15일 이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가 발표되면 곧바로 관저로 겐바 고이치로 외상과 무토 마사토시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그 내용을 분석하고 후속대응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 안팎에선 다양한 반격카드가 거론되고 있다. 그중에서 ‘다케시마의 날’ 지정과 정부내 영토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이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시마네현에서만 기념일로 제정됐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독도 이슈를 상시로 제기할 정부조직을 만들어 일본 국민의 독도 관심을 증폭시키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새역모(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등 극우단체들은 역사교과서와 방위백서, 외교청서에서 독도 기술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땅인 오키섬에 자위대를 배치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시마네현은 지난 5월 말 노다 내각에 자위대의 오키섬 배치를 요청했다.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이나 해양조사선을 독도 해역에 보내는 것도 예전부터 꾸준히 거론되는 조치다.

◆한국의 대응 방향

한국은 이에 맞서 독도 실효지배에 대한 역사적 증거를 보강하고, 국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법상 실효적 지배란 평화롭고 영속적인 지배를 의미한다”면서 “현재 독도는 (일

본의 도발로) 평화로운 상태는 아니며 국제적으로 분쟁이 발생한 이후의 통치 행위는 판결 시 고려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라시대의 통치 등 일본의 이의 제기가 있기 이전의 증거를 찾는 것이 국제법상으로는 중요하다”면서 “독도에 대해 정부가 과도하고 의도적으로 정책 접근하기보다는 과거의 증거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윤재 한국학연구원 교수는 “국가적으로 프로젝트 짜 꾸준히 대내외에 홍보해야 한다”면서 “일본보다 먼저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조용한 외교에서 벗어나 우리 나름대로 꾸준히 홍보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일본은 국내 정치적 불안을 이유로 보수 정책이 강화되면서 양국 관계는 당분간 경색될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대로 통상적 실효지배 강화 조치를 꾸준히 펴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김동진·안두원 기자 [bluewins@segye.com](mailto:bluewins@segye.com)



독도는 우리땅 1인 캠페인 APEC기간 각국 정상과 각료, 언론인들에게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알리는 1인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독도사수연합회 소속 59살 이상훈씨는 오늘 정상회의장이 있는 동백섬 입구에서 ‘독도는 한국영토’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1인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부산MBC[민성빈] 2005-11-16

[경찰이 현수막을 빼앗아 갔습니다.] 편집자



## 미국 “한·일 외교갈등 자제할 것” 압박

기사입력 [2012-08-31 08:29], 기사수정 [2012-08-31 08:29] 아시아투데이 채진솔 기자 = 미국 정부는 독도 및 과거사 문제 등을 둘러싸고 외교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과 일본 정부에 ‘자제’를 촉구했다. 30일(현지시간)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순방 관련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최근 한·일 양국 간 일련의 긴장 사태는 미국의 우려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자제 (restraint)와 침착 (calm), 정치력 (statesmanship)’을 발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빅토리아 놀랜드 국무부 대변인이 지난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일 양국 사이에 분쟁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로서는 ‘편치 않은 (not comfortable)’ 일”이라고 말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어서 압박의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아울러 “비공식적인 대화, 대면 접촉, 기업 차원의 시도 등 한·일 양국이 21세기 파트너로서 협력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한·일 양국과의 양자 접촉에서 이런 것을 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당국자는 동중국해 다편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외교 갈등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동안 양국에 대해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다루고, 미래를 지향하고, 이견에 집중하기보다는 협력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음을 인식하라고 촉구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오위다오’가 미국·일본 상호방위조약 5조에 규정된 ‘미국의 대일 방어 의무’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냐는 질문에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우리의 희망은 이런 대일 방어 상황을 피하고 대화와 외교를 우선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이 당국자는 클린턴 장관의 중국 방문 계획과 관련해 “양국간 광범위한 주제가 논의될 것”이라면서 “아시아의 발전, 한반도의 전개 상황,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 남중국해 문제는 물론 이란,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문제 등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채진솔 기자 jinsolc@asiatoday.co.kr

## 일본이 독도를 국제재판 하잔다

자기 땅을 재판 할 바보가 어디 있나? 일본의 학계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 일본 땅이란 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일본 정치인들이 일본 땅으로 우기고 있다. 일본인들의 지지를 받기 위하여 정치인들이 이용을 하는데 우리는 점점 먹히고 있다. 독도바다가 공동이 된 것과 다른 나라지도가 다케시마로 표시 되고 있는 것을 말 한다. 일본이 평화헌법을 전쟁 할 수 있는 법으로 고치고 독도를 침탈하려 한다면 우리는 군을 보내서 지켜야 한다. 전쟁을 유엔은 막아야 한다. 그러나 양국이 전쟁을 하겠다. 하면 유엔안보리는 양국에 평화적으로 할 것을 권고 할 것이다. 독도를 일본이 양보하면 정권이 무너진다. 어쩔 수 없이 유엔 권고사항을 이행 하는 것은 국제재판이 될 것으로 본다.

독도 이상훈

## “독도 ICJ 공동제소 거부” 정부, 日에 구술서 전달 “우리 땅 독도는 분쟁지역 아냐” 日대사관 관계자 불러 일축

국제신문 정옥재 기자 2012-08-30 20:54

- 겐바 외무상 "매우 실망스럽다"  
- 日, 단독 제소 착수... 연말 제출



오쓰키 고타로(가운데)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참사관이 30일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공동 제소하자는 일본 제안을 거부하는 우리 정부의 구술서를 전달받고 외교통상부에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30일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공동 제소하자는 일본의 제안을 거부하는 구술서(외교문서)를 일본 측에 전달했다.

정부는 구술서에서 “우리 땅 독도는 분쟁 지역이 아니다”면서 일본의 ICJ 공동 제소 제안을 일축하고 우리 정부의 확고한 영토 수호 의지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술서 전달을 위해 외교통상부 최봉규 동북아 1과장은 주한 일본대사관 측 관계자를 이날 오전 11시 청사로 불렀다. 이에 앞서 일본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및 일왕에 대한 사과 요구 발언에 대해 반발하면서 지난 21일 ICJ 제소 제안을 담은 구술서(일

본식 표기 구상서)를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이 ICJ 제소 및 조정 제안을 거부할 경우 일본 정부가 단독 제소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한 바 있어 정부의 반박 구술서에 대한 일본 측의 반응이 한일 외교 갈등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은 이날 독도 문제를 ICJ에 공동 제소하자는 제안을 한국이 거부한 것과 관련,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에 의하면 겐바 외무상은 이날 한국이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일본의 독도 관련 제안을 거부하는 구술서를 전달한 데 대해 이렇게 말하고 “ICJ 단독 제소를 포함해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미 ICJ 단독 제소를 위한 소장의 문안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장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입증하기 위한 역사적 경위와 국제법상의 근거 등을 상세하게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제소까지 적어도 2~3개월 정도 걸릴 전망이다. 따라서 빨라도 연말은 돼야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 제소 소장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독 제소 역시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재판이 불가능하지만 한국 측이 거부 이유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설명할 필요가 생긴다는 것이 일본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ICJ에 가입하면서 강제관할권에 대해 유보했기 때문에 일본이 단독 제소를 해도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재판이 성립하지 않으며, 재판에 응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의무도 없다는 입장이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측에 보낸 구술서와 관련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의 불가분의 고유 영토로 독도에 관해 어떤 분쟁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우리 정부가 일본 측 구술서가 언급한 어떤 제안에도 응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또 “독도가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첫 희생물이란 점과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및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통해 한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로 회복됐다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시켰다”고 설명했다. 일부 연합뉴스

독도사수연합회 후원사, 독도마트 <http://dokdomart.com>

**신우정공**

대표 신재식(용기)  
HL5 JQN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동동 311-4  
TEL : (051) 528-8839  
FAX : (051) 528-8861  
H.P : 011-558-4198  
E-mail : sw8818@chol.com

- 사출금형
- 특수금형
- 다이캐스팅
- 금형설계
- 건축자재
- 할마톤 난간대
- 베란다
- 계단, 핸드레일 관련부품



**나라사랑**

1. 독도모형
  2. 저금통기능
  3. 향수통기능
- “독도사랑저금통”  
검색하시면 됩니다  
010-9901-2853

**OORI PATENT**

대표 변리사 **조철현**

우리 특허 법률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8-23 여삼빌딩13층  
Tel.(02)556-3453 Fax.(02)557-3038  
E-mail : cho@oori.co.kr

**samsungbio**



보온물통과 가방  
055-366-2032



보냉가방

독도소식지 10호의 편집을 끝내면서 독도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국민들에게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고 나라가 없으면 국민은 없고 민족만 있을 뿐입니다. 편집을 도와주신 (주)동아인업 황성일 사장님께 감사사를 드립니다. 독도 이상훈 010-6504-6510

후원 하실 분

법인통장 우체국 601229-01-002084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